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04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1월 1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박근혜의 대답은 출국! 차벽!

결국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맨얼굴을 또다시 확인했다. 10만명 민중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던 그 순간,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경찰은 차벽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했다. 대통령의 도피성 출국은 무책임했고, 경찰의 과잉진압은 도를 넘어섰다. 경찰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를 자신들이 거부해놓고선 마치 집회 주최측이 불법집회를 벌이는 것처럼 호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을 생각도 없고, 폭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극악무도한 폭력! 살인진압!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광화문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벽으로 막아서며 집회 참가자들을 도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통행을 전면통제하는 차벽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차벽을 당당히 설치한 것이다. 차벽으로 시작된 탄압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졌다. 70세의 농민은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쓰러졌고 서울대병원에서 4시간여의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한 명도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며 팔이 부러지고 인대가 끊어졌다. 이 학생을 후송하기 위해 응급차가 들어왔으나 경찰은 응급차 안쪽까

지 물대포를 쏘는 극악무도함을 보였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민중들의 분노가 14일에 서울 광화문 앞에서 폭발했다. 노동개악, 밥쌀용 쌀 수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정권은 이 거대한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폭력으로 살인적인 진압만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역대 정권들이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 결국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박근혜 정권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2차 민중총결기! 총파업!

정권은 민중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 14일 분출된 10만명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법무부장관은 폭력집회를 엄중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노동개악 5대 법안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이상 이 정권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강행하고 반대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귀기울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선택도 한가지 밖에 없다. 귀를 닫은 정권이라면 직접 우리의 힘으로 열어줄 수밖에 없다. 12월 2차 총결기와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오만한 정권을 응징하자. 민중을 배반한 정권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자.



유성영동지회 보수전장지회 코스모축매지회 피엘에이지회 콘티넨탈지회
현대오토넷사내하청지회 세상을 뒤집는 10만의 총결기! 한국델파이진천지회
엔텍지회 코스모링크지회 조합원 동지들의 열정적인 참가 한국타이어지회 대한이연지회
코스파음성지회 북부지역지회 감사합니다! 콜텍지회 한라비스테온공조대전지회

민중 총궐기에 지부 조합원 대거 참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았다. 민중총궐기 준비 과정부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실제로 경찰 추산만으로도 8만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경찰 추산이 8만이라면 실제 규모는 10만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였다.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도 역시 민중 총궐기 열기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노동개약이 현장이 미칠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은 11월 14일 대거 상경하여 거대한 투쟁의 물결에 함께 했다. 영동, 옥천, 대전, 부강에서 7개의 버스가 출발했고, 개별차량으로 상경한 지회도 많은 동지들이 참여했다.

14일 민중총궐기는 시작부터 경찰의 원천봉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광화문 집회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고 경찰의 최루액 물대포에 많은 동지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분노를 정권을 향해 똑똑히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모인 의지를 실질적인 총파업과 2차 민중총궐기로 모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16일 국회에 노동개약 5대 법안을 상정했다. 노동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도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10만 민중총궐기 성사!
총파업으로 달려가자!



풀무원 투쟁 집중탄압!! 사태 장기화 우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의 투쟁이 정권의 집중 탄압을 받으며 악화되고 있다. 16일로 벌써 파업 74일째, 여의도 고공농성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풀무원분회는 9월 4일부터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2명의 동지가 10월 24일부터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측은 대화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고, 경찰을 앞세워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공안물의를 위해 풀무원분회를 무리하게 탄압했다. 현재까지 7명을 구속했고, 파업 대체업무 중인 불법 개조차량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외에도 각종 고소 고발이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다.

풀무원은 화물기사들의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운송업무 외에 상하차 업무를 시켜놓고 다치면 나몰라라 했다. 운송료는 IMF 이후 동결상태였다. 악질자본 풀무원이 무릎 꿇을 때까지 지역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부정·국민 기본권 파괴"

정부·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여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옥주 전북대 교수(헌법학)는 “교과서 발행 국정제도는 과거 파시즘이 성행했던 독일과 일본의 국가통제교육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가 헌법 제1조2항이 담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권자로부터 일정한 전제하에 정권을 위임받은 정부가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가치를 담은 역사를 유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가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를 지닌다”며 “교과서 국정제는 정부가 특정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독점적으로 교화해 청소년을 편협하고 보수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의 수업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했다. 신 교수는 “교사의 교육 자유권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 제31조1항과 교육의 자주성을 명시한 같은 조 4항에서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며 “교과서 국정화는 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해 교육 자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피교육자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헌법상 양심·사상의 자유를 갖는 주체”라며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다양한 사상 형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